재판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핵심… 윤석열, 내란죄 해당"

〉〉 1면 '내란수괴 윤석열'서 계속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사례 언급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처벌 대상
양형 사유로 초범·65세 고령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19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 바 있으며, 내전 끝에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즉,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속보로 타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암적존재 담합, 시장 영구퇴출 검토"

"설탕·밀가루 등 경제산업 전반
범죄 뿌리 뽑아야 질적 도약 가능
공정한 사회로 모두의 경제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산업 전반의 담합 행위에 대해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가겠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1호]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9,816.70㎡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3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 8,452.10㎡(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 2,856.4079㎡ 4) 건축연면적 : 34,210.3897㎡ 5) 건폐율 : 33.80% 6) 용적률 : 232.61%
7) 높이에 관한 계획 : 지하 3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 2M, 인접대지 3M 이격
9) 공동이용시설 : 1,943.0874㎡

3. 분양신청 기간 : 2026년 02월 20일(금) ~ 2026년 03월 24일(화)까지(33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 제외)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	공급면적		비고
공동주택	40	5	40.53㎡	16.48㎡	57.01㎡	17.25평형	
	49	20	49.60㎡	20.53㎡	70.13㎡	21.21평형	
	54	12	54.66㎡	21.97㎡	76.63㎡	23.18평형	
	59	45	59.87㎡	23.99㎡	83.86㎡	25.37평형	
	74	36	75.00㎡	29.23㎡	104.23㎡	31.53평형	
	84	53	84.87㎡	32.58㎡	117.45㎡	35.53평형	
	102	8	102.08㎡	39.29㎡	141.37㎡	42.76평형	
	합계	179세대	12,559.30㎡	4,929.82㎡	17,489.12㎡	-	
근린	유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비고
	지상 1층	147.35㎡	21.97㎡	198.73㎡	368.05㎡	111.34평	
	합계	147.35㎡	21.97㎡	198.73㎡	368.05㎡	111.34평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반영) 기준이며, 향후 관리처분 및 인허가(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 자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8.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10. 이주 및 철거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이주 기간에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2026년 2월 20일]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 석 [직인 생략]

"쿠팡 영업정지, 법적 요건 미충족"

정부·민주 을지로위 대책 점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가 19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독과점 문제나 김범석 쿠팡 의장의 재벌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 불공정 문제, 배달앱 문제, 택배 과로사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쿠팡) 영업 정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 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 사건을 제재하려면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영 참여 여부 입증 및 총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이라는 것을 쿠팡코리아가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쿠팡 본사는 여전히 3300건만 유출됐다고 공시해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두번째로는 쿠팡 회원이 아닌 배송을 받는 사람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 예상이 있을 수 있다고 통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도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송지 목록을 1억4000만 건 이상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쿠팡 사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오늘은 공식적인 점검 자리"라고 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민병덕 쿠팡TF 총괄분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을지로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와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각 부처 역시 쿠팡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